

황룡강 장륙습지 국가습지 지정 중앙부처 힘겨루기에 좌초 위기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 수립 광주시에 통보

국토부 "하천은 습지 아니다...관련법 개정전엔 불가"

국내 1호 도심 속 하천습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광주 장륙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사업이 중앙부처간 극한 대립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주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장륙습지를 국가하천습지로 지정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협의부처인 국토부는 '습지 보전법에 하천은 습지에서 제외돼 있다'며 관련법 개정 전까지 사업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 보호 중심의 환경부와 개발 중심의 국토부간 보이지 않는 부처 갈등이 이번 장륙습지 지정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광산구는 광주시에 장륙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지정건의서를 받은 환경부는 최근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을 수립해 광주시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협의기관인 국토부가 장륙습지의 국가하천 보호지역 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의 반대 입장은 강경하고, 구체적이다. 국토부가 반대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습지 보전법이다. 이 법 제2조에는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또는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하천은 습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한시점 하천계획 담당은 "환경부 측엔 장륙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습지보전법을 개정하거나 하천 일부 구간을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1999년 8월 낙동강 하구 하천 일대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2018년 10월 고창 인천강하구까지 전국 8곳의 하천을 국가습지로 지정해 왔는데, 국토부가 갑자기 장륙습지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환경부 고동훈 자연생태정책 담당은 "국토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간 공식적인 협의 단계에서 국토부와 함께 하천정비 애로사항 등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 한다"면서 "도심 속 국가습지로 추진중인 장륙습지는 지난해 주민 갈등해결 우수 사례로 선정된 역점사업으로, 국가보호습지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부처간 힘겨루기에 광주시의 속만 타 들어 가고 있다. 시는 일단 환경부와 국토부간 조율 과정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양 부처를 상대로 광주시의 입장과 장륙습지 보존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가습지 지정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애초 계획인 연내 지정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일 오전 코로나19 여파로 약 80일만에 학교를 찾은 광주 남구 대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체온검사를 하기 위해 간격을 두고 줄을 선 채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개학 첫 날 광주·전남 68명 발열 증상

고3·소학교 4만1000여명 등교

일부 학생 보건소 이송·귀가

인천·안성 확진자 등교 중단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개학이 연기된 지 79일 만인 20일 교문이 열렸지만, 광주·전남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 속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에서는 고3과 60인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 4만 1000여 명이 설렘 속에 일제히 등교해 수업을 했다.

철저한 방역과 감염 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로 이뤄진 첫 등교에서는 광주·전남에서 68명의 학생이 발열 등의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와 보건소로 이송됐거나 귀가 조치됐다. 이날 각 학교에서는 현관 입구 등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또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해 등교하는 모든 학생의 체온을 측정하고, 37.5도가 넘는 학생들을 선별해 일시적 관찰실에서 관리했다.

또 학생 좌석 배치와 교실 환경도 '거리두기'에 맞춰 학생 책상은 가급적 최소 1m 이상 거리를 확보하고 좌석 배치도 일방향, 지그재그식, 시험 대형 등 학급 상황에 맞게 최대한 간격을 넓혔다. 교실에는 손 소독제, 화장지, 뚜껑 달린 휴지통

등을 비치하고 교실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수시로 했다.

학급별 시차 배식을 하고 급식 시간에 관리 교사를 배치해 급식실 지도, 급식 대기 학생 지도, 급식 종료 학생 지도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등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또 학생들의 밀도를 낮추는 '거리두기'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이동식 컨테이너 교실을 설치하는가 하면 교육청 '나이스(NEIS)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매일 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에서 의심증상 항목을 체크해 유증상자나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의 무난한 등교에도 대입 등 미뤄졌던 학사일정을 보충하기 위해 숨가쁘게 뛰어다녀야 하는 고3과 학부모들의 우려는 깊어가고 있다.

이날 전국에서 고등학생 2명을 포함해 3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인천과 경기 안성시 등에서는 등교 일시 중단 사태까지 발생한 만큼 언제든 학교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휴교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사

실상 학교 수업을 상당 기간 받지 못해 올해 대학 입시는 재수생보다 불리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고3 교실에서는 벌써 한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 지역의 한 고3 학생은 "그동안 학원에 다니며 공부는 계속했지만, 전국에서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큰 시험을 가까스로 다음 날 치는 것이 부담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 역시 인천 같은 사례를 우려하면서 교육당국의 대처를 예의주시하고 등교 긴장감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등교 수업이 생활 방역(생활 속 거리두기) 성패의 시험대이자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의 한 학부모는 "수도권에서 등교 첫날부터 확진자가 나와 귀가조치되는 등 불안감이 상당하지만, 5차례나 미루고 철저히 대비해온 만큼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국방부 "전두환 훈장 받은 62명 5·18 관련엔 박탈 건의"

육군본부 공적 내용 확인 중

7명 광주 투입 계엄군 소속

국방부는 전두환(89)씨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던 62명의 공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훈·포장 수여 근거인 공적이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있으면 해당 인원의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두환은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 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

된다. 1명은 이미 12·12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훈장이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는 나머지 62명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훈·포장 수여 기록에 구체적 공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어떤 근거로 서훈이 이뤄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들의 행정안전부 상훈 기록에는 '국가안정 보장 유공'으로만 기재됐고, 국방부 일반명령에는 훈격,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수여 일자만 기록됐다.

다만, 62명 중 7명은 5·18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계엄군 소속이 추가로

있는지와 이들이 5·18 민주화 운동 진압으로 훈·포장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훈·포장의 공적이 5·18과 무관하거나 5·18 관련 공적이 있더라도 다른 공적이 함께 있다면 특별법에 따른 서훈 취소는 어렵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장 치탈은 훈장을 받게 된 공적을 확인해야 가능하다"며 "이들의 공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시가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시민 1만 2천명을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분야 (2단계 1차)

채용규모

접수기간

지원내용

공공형 일자리
(환경정비, 안전지킴이, 꿈나무지원단 등 10개 사업)

4,102명
(만 18세 ~ 69세 이하)

5월 22일
- 6월 1일

실수령액 약 107만원/월
(3~5개월, 주 25시간, 4대보험)

민간형 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2,000명
(만 18세 ~ 60세 이하)

5월 25일
- 7월 31일

신규채용시 인건비 50%
(6개월, 주 40시간, 4대보험)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참조(www.gwangju.go.kr)

광주광역시